

특별기고

덜 쓰고 더 남기는 농업, 전남이 먼저 답할 때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과 기후 위기로 농업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비료·사료·면세유·시설자재 가격 상승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키우고, 폭염·집중호우·가뭄 등 이상기후는 수확량과 품질까지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 경영비는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14.1% 감소했다. 생산비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농업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많이 쓰는 농업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쓰고 더 남는 가치를 남기는 농업이다. 투입 비용은 줄이고 생산 효율은 높이며 환경 부담까지 낮추는 구조다. '덜 쓰고 더 남기는 농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농가 소득을 지키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전남도는 이러한 전환을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다. 통계청 기준 전남은 전국 경지면적의 약 19%를 차지하는 최대 농업지역이며, 전국 최대 쌀 생산지다. 과수·채소·축산업도 고르게 발달해 식량 생산기반이 탄탄

하다. 특히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25년 기준 약 3만 5000ha로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기반과 대규모 생산기반을 동시에 갖춘 지역은 전남이 사실상 유일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공익직불제 개편,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통해 현장에서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 역시 전남이다.

첫째, 전남은 전국 최대 친환경농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친환경 직불제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가장 빠르게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축적된 친환경 재배기술과 생산자 조직, 유통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이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을 전남은 즉시 확산 단계로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전남은 경종과 축산이 함께 발달한 전국 대표 복합농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자원순환형 농업 실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다. 가축분 퇴비와 액비를 논·밭에 환원하면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지역 내 자원을 다시 활용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전국 최대 친환경농업 지역이면서 동시에 축산기반까지 갖춘 곳은 전남의 독보적 강점이다.

셋째, 전남은 넓은 농지와 집단지원 등녘을 바탕으로

스마트농업 확산에 유리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AX 플랫폼 사업과 AI 글로벌비즈니스센터, AI 데이터센터, AI 스마트팜 실증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정밀농업, 드론 방제, 자동 관수 시스템 등을 적용하면 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일 수 있다. 소규모 분산 농지보다 대규모 평야지대가 많은 전남은 스마트농업의 효과가 훨씬 크다.

넷째, 전남은 기후변화 대응형 작부체계 전환에도 유리하다. 논 이모작, 조사료 생산, 콩과작물 윤작 등 다양한 작부체계를 적용할 수 있어 비료 사용 절감과 토양 회복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특히 논물 걸러대기 등 물 관리 기술을 접목하면 메탄 감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전남 농업은 친환경과 관행의 구분을 넘어 저투입·고효율·저탄소 농업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친환경농업은 탄소흡수형 농업으로 고도화하고, 관행농업은 정밀 시비와 AX 플랫폼 등 스마트농업으로 혁신해야 한다. 정부 정책과 전남의 현장 역량이 결합될 때 가장 큰 성과가 나온다.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며 환경을 지키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이제 경쟁력의 기준도 생산량만이 아니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어야 한다. 적게 투입하고 비용은 낮추며 소득은 높이고 환경까지 지키는 농업, 덜 쓰고 더 남기는 농업을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전남이다. 전남이 먼저 답할 때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도 함께 열린다.

기고

표 없는 아동의 목소리, 지선 정책 중심이 돼야

변정량

초록우산광주지역본부 복지사업팀장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동복지 한 걸음을 걸어온지 어느덧 22년이 됐다.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정책을 봐왔지만 올해 맞이하는 5월5일 어린이날은 그 어느 때 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온다. 제9회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작고 낮은 목소리인 아동 정책이 또 다시 우선순위에 밀려나지 않을까, 이 벤트나 형식적인 참여로 정책은 만들었지만 실행이 안되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공약들 사이에서 아동이 '현재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정책은 늘 '미래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현재의 실행 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일쑤다.

특히 건축정책의 논리가 지배할 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 청소년 예산이 가장 먼저 희생 되고, 참여권이 '장식'으로 전락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문하게 한다.

물론 22년 전 현장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와 비교하면 성장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아동청소년과 이를 지원하는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실행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정책은 늘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의 참여와 이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세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짜 참여를 넘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참여'.

로저 하트(Roger Hart)의 아동참여 8단계가 있다. 이 모델은 아동의 참여가 단순히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다.

1~3단계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닌 가짜참여이며, 4단계부터 비로서 진정한 참여로 간주한다. 이제는 최소 5~6단계 이상의 실질적 권한 공유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지자체의 아동 참여는 로저하트가 경고한 형식적 참여(3단계), 조직이나 장식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이 지자체의 조례가 되고 예산에 반영되어 실제적으로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체감하게 해야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미래를 가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둘째, 모든 행정의 기준이 되는 '아동권리기반'.

아동 정책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문화, 복지, 행정, 도시계획 등 지방 행정의 전 분야에 아동권리기반이 녹아져야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은 아동 청소년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전략이다.

아동에게 안전한 도시는 노인, 장애인에게도 모든 시민에게도 안전하듯이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행정적 시스템

으로 체계화해 모든 정책이 시행되기 전 '아동권리기반' 인가를 검토하는 행정적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세 번째, 예산삭감의 공포없는 지속가능한 아동청소년 정책 필요.

지금까지 보면 정책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된다. 그럴수록 정책은 펼치는 의무이행자들에게 신뢰가 간다. 아동권리기반의 아동청소년 사업들은 경제적 성과나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내기 어려워져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예산을 편성했다고 허덕여도 삭감이 된다. 아동청소년 정책 예산은 아동청소년이 사는 이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보고 어떤 정치적인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동권리 하한선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가 경험한 현장은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이다. 아동기는 짧고도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훗날 어떤 정책으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

2026년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아동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닌 우리 사회의 가장 작고 낮은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한다.

우리 아이들이 '내일의 희망'이 아닌 '오늘의 시민'으로 대우받는 변곡점이 돼야 한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당부드린다. 어린 이남의 일회성 이벤트나 선물보다 아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가 실현되고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어른들이 많은 나라다. 이번 선거가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세우는 진정한 '아동권리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취재수첩

중동발 물가 비상...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윤용성
산업부 기자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가 동시에 맞물린 '3중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민의 고통이 현실화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부터 건설자재, 먹거리까지 오르지 않는 품목이 없기 때문이다.

또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외식비, 교통비,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며 서민들의 입상은 빠르게 팍팍해지는 등 이미 체감 물가는 한계에 가까워졌다.

문제는 이 충격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공급이 막힌 의류기 판매 업체도 타격을 받고 있으며, 약국에서 쓰는 용품도 제때 공급이 안 되고 식품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포장 용기 가격마저 급등하며 어려움에 처했다.

서민 생활과 산업 전반을 동시에 짓누르는 구조적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대책에서 물가안정이 우선 순위임은 두말할 나

위 없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단기적인 수급 점검과 소비 절감, 일부 지원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외부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

이제는 위기를 임시로 넘기는 대응에서 벗어나 원자재와 에너지 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산업 체질을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 등 구조적, 근본적 재질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산업 현장과 민간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전략 품목의 수출입 제한 등 긴급 조치도 때를 놓치지 말고 선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인 만큼 민생물가 대응책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설

중대선거구제, 정치의 질적 성장 견인하길

6·3지방선거 광주시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국회가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에 이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광역의원 선거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입되는 선거구는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를, 광산을 4곳이다. 기존에 1명을 뽑았던 이들 선거구는 이번에 2명을 선출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를 말한다.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상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제 2공화국때 상원의원직인 참의원 선거에서 잠깐 도입됐다 제4공화국때인 1972년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1981년 국회의원 선거때까지 지속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때는 전국 시·군·구의원 11곳에 시범 도입됐는데 이번에 총 27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이 대선 구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4년 전 지방선거에서 20명을 선출했던 광주시의원은 이번에는 4명이 늘어난 24명을 뽑게 됐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중대선거구가 도입된 것은 전남광주통합특활시가 출범하면서 광주시의원 정수가 전남도의원 정수와 큰 차가 발생해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광주시의원 비례대표는 3명에서 4명으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는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시범 도입지역을 광주 일부 지역으로 한정해 대다 도입 대상 선거구도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게 만든 점 등을 들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더불어민주당 1당 체제'나 다름없던 광주 선거 구도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이번 도입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성공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할 때다.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성공추진 기대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나주시가 최근 이 사업의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당선작은 토지 활용을 극대화한 합리적인 배치와 내부와 외부 공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기능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산강의 자연환경을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과 입체적 공간 구성으로 상징성과 완성도를 갖춘 설계안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내년까지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입, 금천면 원곡리 1043번지 일원에 반려동물 친화형 문화 인프라 구축과 관광 자원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곳에는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오프리쉬존', 애견 수영장, 반려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애견 카페·임업지원센터, 관련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애견 뮤지엄', 애견 동반 클럽핑장인 애니멀 스테이 등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

이 사업은 나주시가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의 하나로 전국 1500만 반려인들의 친화 관광과 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중 2 단계로 추진되는 것이다.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나주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로 나주시는 지난 2024년 1단계로 반려 문화 기반 정착을 위해 년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하고 금천면 원곡리에 반려견 플레이그라운드까지 조성했다.

이번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나주시는 전국 반려인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관광 명소가 거듭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3단계로 펫 헬스케어 및 체류형 반려동물 관광 산업을 선점하고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펫푸드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나주시의 계획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지)	면적 부 370-7082	사건 부 370-7050	농림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관광국 370-707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